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ECB, 긴축 재정정책 강조

- 유럽중앙은행(European Central Bank)은 유로지역 경제가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긴축 재정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.
 - 트리셰 ECB은행장은 유로지역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재정지출과 세수관련 정책이 엄격히 이루어지는 것만이 가계, 기업, 투자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함.
 - 그러나 이는 지난주 G20 국가들을 대상으로 미대통령이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내수 진작이 더욱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대조를 보임.
 - 미대통령은 특히 독일과 중국의 재정확대를 요구하였는데 6월말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.
- ECB의 6월 Monthly Bulletin은 긴축재정이 취해질 경우 재정조달의 니즈가 감소하고 금리가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한편,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 감세함으로써 실질 GDP를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함.
 -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을 통해 GDP 대비 정부 부채를 성공적으로 감소시킨 사례로 벨기에(1994-2007, 50%p 감소), 아일랜드(1994-2007, 69%p 감소), 핀란드(1995-2008, 24%p 감소)를 거론하고, 긴축재정과 정부부채·성장과의 관계를 비용·편익 분석함.
- 한편, ECB는 유로지역의 재정지출 감축을 강화하고, 정부채권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억제하며, 규정된 지출규모를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함.
 - 유럽연합 국정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유럽발 재정위기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도가 배경이 됨.
 - 향후 유로지역 정부채권시장 개입을 되도록 억제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재정위기 국가들의 재정지출 억제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함.
 - 실제로 6월 셋째 주에는 단지 40억유로의 정부채권만 매입하였는데 이는 구제금융지원프로그램이 발효된 5월 이후 가장 적은 규모로 알려짐.
 - ECB이사회는 정부채권 매입은 일시적인 정책에 불과하며 정부채권 매입 규모는 영란은행과 미연방은행의 매입규모에 크게 미달할 것이라고 언급함.

(ECB 6/21, Financial Times 6/21)